



가공할 중국의 위협

-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오늘의 중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

작성자: 이윤석 박사, 김원철 박사

발행일: 2026년 8월 22일

발행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이 리포트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진지한 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포트는 고유 방법론 SIEW Framework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자료 탐색·정리와 초안 작성 과정에서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사실과 논거는 연구진의 검토·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내용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작권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이슈 한 줄 정의

- 중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산업·기술·공급망·군사역량을 갖춘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공산혁명의 유산을 가진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체제와 21세기 첨단국가 역량의 결합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새로운 복합위협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 상황 요약

- 외교부는 2026년 7월 28일과 8월 17일, 불과 20일 사이에 두 차례나 중국 내 종교활동 안전공지를 냈으며, 두 번째 공지에서는 우리 국민의 단속·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음
- 중국은 인구가 한국의 약 27배, GDP 약 10배, 군사비 약 7배이며, 전기차·배터리·조선·AI·로봇·희토류 등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중국공산당은 정치·군사·언론·교육·종교·경제를 지배하며, 시장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당 밖의 기업·교회·사회조직 자율성은 강하게 경계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온라인 여론·대학·군사시설·부동산·참정권 문제가 나타나며, 공급망·산업인력의 중국 집중과 대기오염·원전사고 등 초국경 위험도 점검해야 함

□ 핵심 문제

1. 중국의 위협은 종교·인권, 첨단산업·데이터, 공급망·산업인력, 정보·해외 영향력, 북한·서해·대만, 군사·환경안전이 서로 연결된 복합위협임
2. 더 근본적 문제는 중국의 막대한 국가역량이 자율적 영역을 경계하는 중국공산당 일당체제 안에서 통합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임
3. 사드 이후 한한령과 경제적 압박에서 경험했듯, 군사침공뿐 아니라 경제·기술·정보·외교 압력으로 국가적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함

□ 결론

- 중국의 경제·기술적 성취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산당 일당체제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핵심은 세계적 수준의 산업·과학기술·데이터·공급망·군사력이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체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임
- 대한민국은 중국과 교류하되 시장·공급망·기술·데이터·산업인력의 과도한 의존과 위험한 접근경로를 줄이고, 군사·사이버·환경·원전 위험에도 대비해 중국의 압력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한국 교회는 중국인을 적대하지 않되 하나님의 절대권위와 교회의 자율성을 당의 정치적 지도 아래 두려는 종교통제를 분별하고, 새로운 중국선교 지침과 국내외 중국인 선교를 발전시켜야 함

문의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사무국 (홈페이지: www.siew.or.kr)

- 전화: 010-4682-0191 / 카카오톡 ID: siewsiew / 페이스북 그룹: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이메일: siewsince2021@naver.com / 후원: 농협 355-0077-2712-43 예금주: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S - Scan |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핵심 질문:

“외교부가 불과 20일 사이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해 두 차례나 안전공지를 낸
오늘의 중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며, 그 힘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어떤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1] 대한민국 외교부가 올 여름 불과 20일 사이에 중국의 종교활동에 대해 두 차례나 경고했음

- 2026년 7월 28일 외교부는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우리국민 안전공지」를 게시했고, 20일 뒤인 8월 17일에는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단속 강화에 따른 안전유의 안내」를 다시 게시했음
- 두 번째 공지는 “최근 중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이 단속 및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했음. 구체적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선교사와 관광·무비자 입국 후 전도·성경공부 등을 하는 한국 교회의 단기선교팀도 이러한 단속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음
- 한국 교회에는 매우 직접적인 경고임. 더 큰 질문은 외국인의 종교활동까지 강하게 통제하는 중국 국가의 힘은 종교 이외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임

[2] 중국선교의 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음

- 2017년 중국은 연길지역의 한국인 선교사 32명을 추방했고, 2018년 개정 「종교사무조례」 시행 전후로 미등록 가정교회에 대한 폐쇄·감시와 지도자 구금도 크게 강화됐음
- 2025년 10월 베이징 시온교회에 대한 전국적 단속으로 김명일(진밍르·Ezra Jin)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됐음. 김 목사는 약 9개월간 구금된 뒤 2026년 7월 석방됐으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그의 구금 문제를 직접 제기한 이후였음. 시온교회 관계자 8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었음
- 2025년부터 외국인의 무허가 설교, 포교, 종교교육, 종교자료 배포 등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됐고, 2026년에는 한국인 단속·처벌 증가에 대한 외교부 경고까지 이어졌음. 중국의 종교통제는 현재진행형임

- 중국공산당이 기독교를 특히 경계하는 데는 체제적 이유가 있음. 기독교인은 국가와 당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는 국가 밖의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며 세계 교회와 연결됨. 공산당이 이념·조직·정보를 독점하려 할수록 이러한 기독교의 특성은 잠재적인 체제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

[3] 중국은 기본적인 국가 규모 자체가 대한민국을 압도함

- 2025년 중국 인구는 약 14억 700만 명, 한국은 약 5,168만 명으로 약 27배임. 인구감소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막대한 인적자원과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함
- 세계은행 기준 2025년 명목 GDP는 중국 약 19.5조 달러, 한국 약 1.9조 달러로 약 10배임. UBS 『Global Wealth Report 2026』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백만장자도 중국 본토 약 530만 명, 한국 약 132만 명으로 중국이 약 4배여서, 중국에는 막대한 규모의 고자산·고구매력 계층이 존재함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기준 2025년 군사비는 중국 약 3,360억 달러, 한국 약 478억 달러로 약 7배이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군사비 지출국임. 군사력에서도 현격한 차이 존재

[4] 중국은 규모만 큰 나라가 아니라 첨단산업 강국으로 변했음

- 중국은 2025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혁신지수에서 처음 세계 10위에 진입했고, 혁신 산출에서는 세계 5위에 올랐음. 과거의 ‘값싼 제품을 만드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만으로 오늘의 중국을 설명하기 어려움
- 중국 전기차 기업 BYD(Build Your Dreams)는 2025년 전기차 약 226만 대를 판매해 테슬라를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에서 앞섰음. 2024년 전 세계 신규 산업용 로봇의 54%인 약 29만5천 대도 중국 공장에 설치됐고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은 200만 대를 넘어섰음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5년 재화중량톤수(DWT) 기준 세계 선박 건조량의 56.1%, 신규수주의 69.0%, 수주잔량의 66.8%를 중국이 차지했음. 조선·전기차·로봇 등 실물 제조업에서 중국의 규모와 경쟁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

[5] 이 거대한 힘을 지배하는 중국공산당은 작은 혁명조직에서 출발했음

- 중국공산당은 1921년 첫 당대회에 불과 13명의 대표가 참석한 작은 혁명조직

으로 출발했지만, 28년 뒤 국민당을 대륙에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함

- 프랭크 디코터(Frank Dikötter)는 2026년 『Red Dawn Over China』에서 공산당의 승리를 소련의 자금·무기 지원, 일본 침략으로 생긴 권력공백, 강력한 조직과 선전, 무자비한 소모전의 결합으로 분석함
- 특히 디코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복하려는 의지”를 강조. 이는 중국인의 민족성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란 혁명정당의 역사적 조직문화로 보아야 함

[6] 마오주의의 혁명정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고 대한민국도 직접 경험했음

- 마오쩌둥(毛澤東, Mao Zedong) 집권 후 토지개혁·숙청·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으로 정치동원이 계속됐음. 디코터는 대약진운동 기간 최소 4,500만 명의 비정상적 사망을 추산하고 있음
- 앤드루 G. 월더(Andrew G. Walder)는 문화대혁명 초기 5년간 약 110만~160만 명이 사망, 2,200만~3,000만 명의 정치적 박해를 추정함. 견제되지 않는 혁명권력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임
- 1950년 중국군의 대규모 6·25전쟁 참전은 북진하던 국군과 유엔군을 후퇴시켰고, 북한정권의 생존과 오늘의 한반도 분단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

※ 중국 복합위협의 3가지 유형

- | |
|--|
| <p>①체제·강압·영향력 위협: 종교통제, 첨단감시, 데이터·온라인 여론·학술·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 군사·외교·경제적 압박 등 중국의 국가역량이 의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협</p> <p>②전략적 의존·구조적 취약성: 중국시장·공급망·산업인력·기술·데이터 등에 대한 높은 집중처럼, 평상시의 경제적 연결이 위기에는 대한민국의 선택을 제약하는 취약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협</p> <p>③초국경·복합안보 위협: 대기오염·원전사고와 같은 초국경 위협, 대만·서해·북한 문제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공급망·에너지·군사·국민안전 위기로 연결되는 비의도적 또는 복합적 위협</p> <p>⇒중국 위협은 ‘중국의 의도’만이 아니라 능력·접근경로·한국의 취약성·발생 가능성·피해규모를 함께 평가해야 함</p> |
|--|

[7] 오늘의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 지배가 첨단기술과 결합해 작동하고 있음

- 중국은 자유선거를 통한 집권당 교체 없이 중국공산당이 정치·군사·언론·교육·종교·경제와 사회 전반에 최고지도력을 행사하는 **당-국가체제**임
- CCTV, 안면인식, 인터넷 검열, 빅데이터, AI는 산업혁신의 수단인 동시에 국가의 정보수집과 사회통제 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
- 마오 시대의 정치통제에 21세기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통치능력에 주목해야 함. 미등록 교회 단속과 가정교회 지도자 체포도 계속되고 있음

[8] 중국산 제품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네트워크 장비이기도 함

- 전기차·드론·CCTV·스마트TV·가전제품에는 카메라·마이크·GPS·통신모듈과 각종 센서가 탑재되고 외부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음. 따라서 제품의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로 가고 누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도 국가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음
- 2024년 한국군은 군부대에 설치돼 있던 중국산 CCTV 1,300여 대를 모두 철거했음. 군 당국은 해당 장비가 촬영 영상을 중국의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 정보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음
- 미국도 2025년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커넥티드카의 특정 통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제한했음. 군·발전소·통신망·정부기관·첨단연구소는 서버·펌웨어·데이터 전송·원격접속 기능까지 점검해야 함

[9] 중국에 대한 시장·공급망·산업인력의 높은 의존은 전략적 취약성이 되고 있음

-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限韓令), 한국 단체관광 제한, 롯데에 대한 조사·영업정지 등이 이어졌음. 중국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이 외교·안보 갈등에서 실제 압박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중국은 희토류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전략산업의 핵심 병목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1년 요소수(尿素水) 사태를 경험했음. 원자재와 부품의 특정 국가 집중은 위기 때 산업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흔들 수 있음
- 인력에서도 비슷한 집중이 나타남. 2024년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약 22만9천 명으로 전체의 14.7%였으며, 국적·체류자격이 확인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89.6%(한국계 중국인 83.7%, 일반 중국인 5.9%)를 차지했음. 시장·자원뿐 아니라 주요 산업의 인력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함

[10] 온라인 여론, 대학, 학술교류도 외국 영향력 경쟁의 공간이 되고 있음

- KAIST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진은 2006~2025년 네이버 댓글 약 1억1,266만 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과 유사한 계정 2만3,998개를 식별했음. 중국 계정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외국세력의 온라인 여론개입 가능성을 보여줌
-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당시 전남대에서는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시민들이 대치하고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대학도 국제 정치와 외국 영향력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 공간임
- 공자학원도 외국정부 영향력과 학문적 자율성 문제로 미국에서는 2019년 약 100곳에서 2023년 5곳 미만으로 줄었고 유럽에서도 폐쇄가 이어졌지만, 한국에서는 2026년 현재 대학 등을 중심으로 약 24곳의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한국도 자금·운영구조·학문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안보적 경고신호임

[11] 중국의 선거·정치과정 개입은 여러 민주국가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다뤄졌음

- 캐나다는 중국의 2019·2021년 총선 개입 의혹에 국가 차원의 공개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중국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주요 외국개입 행위자로 평가했음. 다만 총선 전체 결과가 바뀌었다고 결론내리지는 않았음
- 미국 정보당국도 중국의 연방의회 후보 등에 대한 영향력 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대만은 2024년 총통·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압박, 허위정보와 여론·인식 조작, 중국 초청여행 등을 중국의 선거개입 수단으로 문제 삼았음
- 한국에서 중국정부 또는 그 연계 세력이 특정 선거의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수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바 없음. 그러나 외국 연계 온라인 여론활동과 중국의 정치·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실제 중국의 선거 영향력 활동이 확인된 사례까지 고려하면 한국 역시 그러한 시도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접근해서는 안 됨. 캐나다·미국·대만·뉴질랜드 등이 이를 국가안보 의제로 다루는 만큼 온라인 여론조작, 외국자금, 정치인 및 후보자 접근, 중국계 사회 네트워크 등 개입경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함

[12] 한국의 개방성에 비해 한·중 간 상호주의에는 상당한 비대칭이 있음

- 2025년 말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은 10만8,231호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6만1,439호로 56.8%를 보유함. 전체 국내주택의 0.55% 수준이지만 중국인의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음. 반면 중국에서는 도시 토지는 국가, 농촌 토지는 원칙적으로 집단 소유이므로 한국인을 포함한 개인은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도 체류·취업 등의 요건이 있으며 토지는 사용권 형태로 이용함
- 한국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며, 2022년 외국인 유권자의 78.9%인 9만9,969명이 중국 국적이었음. 반면 중국의 선거권은 중국 시민에게만 부여돼 부동산과 참정권 모두 상호주의 관점 검토 필요함

[13] 중국 관련 안보 침해와 외교적 압박은 이미 한국 안에서 실제로 나타났음

- 국정원은 2024년 6월 이후 중국인의 군기지·공항·항만·국정원 시설 무단촬영 사건 11건을 보고했음. 2026년에는 군사시설 전투기 촬영, 통신감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일반이적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중국군 출신자들의 군사통신 감청, 자료유출 혐의 사건도 발생했음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2023년 한국 정부를 향해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고, 한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이라는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함. 또 “중국의 패배에 베풀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경고했음. 한국 외교부는 이를 외교관 직무와 관례에 어긋나고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공식 비판했음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서는 ‘혼밥·홀대’ 논란과 함께 한국 사진기자 2명이 중국 측 경호인력에게 폭행당해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음

[14] 중국의 대규모 에너지시설은 한국에도 초국경 환경·안전 위험을 제기함

- 중국 동부의 산업시설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기상조건에 따라 서해를 건너 한국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중국 내부만의 환경문제가 아님
- 중국은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원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정상운전의 방사선

영향은 현재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수일 내 한국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공동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함

[15] 중국의 군사력과 서해·북한·대만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접 연결됨

- SIPRI는 2026년 1월 중국이 약 6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 중국의 핵전력은 현재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이 여러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갈등이 발생했으며, 2025년에는 한국 조사선의 접근을 중국 해경이 막기도 했음. 2026년 중국이 일부 구조물을 이동했지만 해양관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 북한에게 중국은 여전히 핵심적인 외부 파트너이며, 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해상물류, 에너지, 반도체, 주한미군, 북한의 동시도발, 중국의 경제압박이 함께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서해·북한·대만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힘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만나는 공간임

★[복합위협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용 가상 시나리오)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해상·공중 봉쇄에 들어가고 미국이 한국에 군수·기지 지원을 요청한다. 중국은 한국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하는 동시에 희토류와 배터리 핵심 소재의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통관과 영업을 압박한다. 서해에서는 중국 해경과 함정의 활동이 급증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서해·DMZ 도발로 한국군의 전력을 한반도에 묶어 둔다. 같은 시기 국내 항만·통신·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에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까지 확산된다. 온라인에서는 ‘미국 때문에 한국이 전쟁에 끌려간다’, ‘중국에 협조하면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과 허위정보가 폭증하며 국내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라진다.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인, 유학생, 교회·선교 관계자들의 안전과 출국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부에는 중국과 타협하라는 압력이 커진다.

이때 중국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단 한 발도 발사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군사·경제·공급망·사이버·외교·여론·국민안전의 위기를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중국 복합위협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 중국 위협의 핵심 질문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음. 더 현실적인 질문은 ‘중국이 경제·기술·정보·외교·군사적 힘을 이용해 대한민국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가’임

[핵심 정리]

- 2026년 7월 28일과 8월 17일 연이어 나온 외교부의 중국 종교활동 안전공지는 ‘오늘의 중국’을 들여다보는 작은 창임. 그 너머에는 한국의 약 27배 인구, 10배 경제규모, 7배 군사비를 가진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첨단기술·공급망·데이터·군사역량을 축적하고 있음. 경제·기술·정보·종교·외교·안보·환경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과 위협이 대한민국과 연결되고 있음. 이러한 막대한 국가역량의 중심에는 당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영역을 경계하는 중국공산당 일당체제가 있음. 대한민국은 개별 사건을 따로 보지 말고 중국의 ‘힘’과 ‘규모’가 어떻게 복합적인 압박과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함

■ I — Interpret |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는가

✓ 핵심 질문:

“국가권력과 인간의 자유, 경제와 기술의 발전, 교회의 선교와 평화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오늘의 중국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1] 모든 인간은 국가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

-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선언함(창 1:27).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국가·민족·계급·정당에 대한 유용성으로 결정되지 않음
- 따라서 혁명, 국가안보, 경제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개인의 생명, 양심, 가족과 자유를 함부로 수단화할 수 없음
- 국가를 평가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권력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함께 보아야 함

[2]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지만 절대적인 권력이 될 수 없음

- 로마서 13장은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만, 국가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제한된 권력임. 인간의 궁극적인 충성은 국가나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행 5:29)
- 성경은 바로와 바벨론 제국 등 국가권력이 자신을 절대화할 때 인간과 신앙을 억압할 수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줌. 국가가 양심·예배·진리까지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
-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므로 지도자와 정당도 권력욕과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음. 따라서 권력이 집중될수록 법과 제도, 투명성과 견제가 더욱 중요함

[3] 하나님은 국가가 모든 사회영역을 지배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음

- 하나님은 국가뿐 아니라 가정·교회·기업·학교와 다양한 공동체에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주셨음. 국가는 공공질서와 정의를 담당하나 모든 영역의 주인은 아님
- 기독교는 자유시장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지만 사유재산, 기업활동,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정당한 자율영역을 인정함. 시장 역시 하나님의 도덕질서 아래 있지만 국가에 완전히 흡수되어서는 안 됨
- 교회는 그리스도께, 학문은 진리 탐구에, 기업은 정당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충실해야 함. 국가 밖에 자율적인 인간과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질서의 일부임

[4] 경제적 번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정치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뜻하지 않음

-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지성·재능·노동·자연자원과 사회질서의 혜택을 허락하심(마 5:45, 행 14:17). 따라서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회에서도 경제·과학·기술과 문화의 놀라운 성취가 나타날 수 있음
- 중국의 경제발전 역시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능력과 노동, 시장·교육·기술축적, 세계무역 등의 결과임. 이러한 성취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체제와 종교정책을 정당화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임
-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알지 못했던 강대국이 번영한 사례가 반복됨. 경제적 성공은 그 국가의 이념과 권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아님

-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부·기술·국가역량을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가, 아니면 권력과 통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가임. 많이 받은 국가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짐

[5] 첨단기술은 인간을 섬길 수도 있고 권력의 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음

- 과학기술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생명과 편익을 증진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손에서 기술은 감시·통제·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 특히 AI·빅데이터·안면인식·통신기술이 강력한 중앙권력과 결합하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으로 개인의 행동과 정보가 통제될 수 있음
- 제9계명은 거짓 증언을 금하며(출 20:16), 진실한 정보와 자유로운 검증은 공동체의 건강에 필수적임. 정보와 기술의 힘이 커질수록 진실, 사생활, 학문의 자유, 권력에 대한 감시도 중요해짐

[6]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힘을 준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님

-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지만(롬 12:18), 동시에 국가에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할 책임도 부여함(롬 13:4)
- 창조세계는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니며 국경을 넘어 이웃의 생명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이 있음. 국가의 산업과 에너지정책도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강대국의 압력을 두려워해 영토, 신앙의 자유, 동맹, 핵심기술, 외교적 선택권을 포기하는 상태를 성경적 평화라고 할 수 없음
- 국방·동맹·공급망·기술과 환경·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역량을 갖추는 것은 갈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평화의 준비임

[7] 이웃 사랑은 무분별한 신뢰가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함께 요구함

- 성경은 나그네와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도록 가르침. 따라서 중국인이라는 국적이나 민족만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적대하는 것은 기독교적 태도가 아님
-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음(마 10:16). 사랑은 위험을 보지 않는 순진함이나 맡겨진 것을 보호하지

않는 무책임을 뜻하지 않음

- 사람에게는 사랑과 환대를 베풀되 국가·기업·교회에 맡겨진 민감한 정보와 위험한 접근경로에는 책임 있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함

[8] 선교의 사명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과 장소는 지혜롭게 바꿀 수 있음

-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명령은 중국의 정치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사라지지 않음. 중국 국민 역시 한국 교회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임
-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도 가르치셨음(마 10:23). 선교의 열심 때문에 현지 성도와 선교 참가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반드시 더 신앙적인 것은 아님
- 중국 현지 사역의 공간이 좁아졌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직장인·이주민과 세계 각지의 중국인을 섬기는 등, 사명은 유지하면서 방법과 장소를 새롭게 찾을 수 있음

[핵심 정리]

- 기독교 세계관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국가와 정당의 절대화를 거부하며, 가정·교회·기업·학교와 시민사회가 가진 정당한 자율영역을 인정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경제·기술의 성공이 인간의 존엄과 신앙·양심·진실의 자유를 침해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음. 첨단기술과 강한 국가권력일수록 책임과 견제가 필요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공동체를 지킬 힘을 준비하는 것도 모순되지 않음. 한국 교회는 중국공산당 체제를 분별하되 중국인을 사랑하고, 선교의 사명을 지키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함

■ E — Evaluate |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 핵심 질문:

“성경적 인간관·국가관·경제관·교회관에 비추어 중국공산당 체제와 대한민국 및 한국 교회의 중국 인식에는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가?”

[1]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정치 구조임

- 중국공산당은 정치·군사·언론·교육·종교와 사회 전반에 최고지도력을 행사하며 자유선거에 의한 집권당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독립적인 언론·야당·시민사회와 종교가 최고권력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면 지도부의 오류가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장기간 지속될 위험도 커짐
-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큰 인간적 재앙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임

[2] 인간을 혁명과 국가목표의 수단으로 보는 사고는 잘못임

- 중국 공산혁명은 평등과 새로운 사회를 내세웠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폭력·숙청·강제동원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 당이 역사의 방향과 정의를 독점하면 반대자를 제거하고 개인의 생명과 고통을 미래의 이상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정당화하기 쉬움
- 성경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논리를 거부함(롬 3:8). 어떤 혁명과 국가목표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마음대로 희생할 권리를 주지 않음

[3] 종교를 공산당의 정치목표 아래 두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함

- 공식 삼자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종교자유가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움. 설교·교육·인사·전도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함
-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는 고백에서 출발하며 국가와 당을 궁극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음. 국가가 교회의 충성대상을 그리스도에서 당과 체제로 옮기려 한다면 종교관리를 넘어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
- 중국공산당은 모든 종교를 통제하려 하지만, 특히 기독교는 당을 넘어서는 궁극적 권위, 독립적인 교회조직, 세계 교회와의 연결 때문에 이념, 조직, 외국 영향력의 측면에서 강한 경계대상이 되어 왔음

[4] 경제·기술적 성공이 일당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지는 않음

- 중국의 고층빌딩·고속철도·전기차·AI·로봇은 ‘가난하고 낙후된 공산국가’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

- 그러나 경제적 번영과 기술적 성취는 정치체제의 도덕적 정당성과 동일하지 않음. 중국에서는 시장경제와 첨단기술이 정치적 자유화가 아니라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와 함께 발전했음
- 중국공산당은 시장을 활용하면서도 사유재산·민간기업·시민사회·교회가 당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 영역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함. 첨단기술까지 통치와 감시에 활용된다면 경제·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권력집중을 강화할 수도 있음

[5]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전략적 의존과 안보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됨

-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필요하지만, 2016~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 단체관광 제한, 롯데에 대한 압박은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에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중국은 희토류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주요 공급망에서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음. 한국도 요소수 사태와 특정 국가에 집중된 건설 외국인력 구조 등을 통해 원자재·시장·인력의 과도한 집중이 취약성이 될 수 있음을 점검해야 함
- 기업에는 가장 효율적인 공급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국가에는 위기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단기적 경제효율이 국가의 외교·안보적 선택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음

[6] 산업과 에너지 발전의 위험을 이웃 국가에 전가해서는 안 됨

- 중국 동부의 대규모 산업·화력발전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기상조건에 따라 한국의 대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국가의 경제발전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 됨
- 중국 연안 원전의 정상운전이 현재 한국에 심각한 방사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확률·고충격 위험은 별도로 관리해야 함
- 거대한 산업·에너지 시설을 운영하는 국가는 그 규모에 걸맞은 안전관리, 정보공개, 초국경 환경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도 중국의 관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감시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음

[7] 자유사회의 개방성이 일방적인 비대칭으로 고착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함

-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 재산권과 일정한 지방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특징임. 그러나 개방은 상호주의·공정성·국가안보와 함께 설계되어야 함
- 한국에서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외국인은 물론 개인이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도 한국보다 강한 요건이 존재함
- 한국은 일정 요건의 외국인 영주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중국은 외국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음. 국가 규모와 정치체제가 크게 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개방의 수준을 상호주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외국 영향력 문제를 사후 형사사건의 입증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됨

- 국가안보와 형사재판은 판단목적이 다름. 특정 행위가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가와 국가가 위협한 영향력 경로를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임
- 여러 국가가 중국의 선거·정치 영향력 활동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공자학원도 학문의 자유, 외국정부 영향력 등의 우려로 대규모 재검토됐음. 국내에서도 군사시설 촬영·감청 사건이 실제 적발됐음
- 안보는 사건이 발생한 뒤 간첩을 찾아내는 것보다 위협한 접근경로를 미리 관리하는 데서 시작됨. 능력·접근경로·피해규모가 크다면 자금·조직·연구협력·민감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보안조치가 필요함

[9] 중국의 강압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도 모두 잘못임

- 중국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주권국가 간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야 함
-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사드·동맹·서해·대만 등 국가안보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지키는 것은 모순되지 않음
- 동시에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판을 중국인 개인에 대한 혐오로 확대해서는 안 됨. 중국 국민과 공산당 체제를 구별하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권력과 위협에는 냉정한 분별을 적용해야 함

[핵심 정리]

- 중국 문제의 핵심적인 왜곡은 국가와 당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인간과 교회·기업·시민사회의 자율영역을 정치목표 아래 종속시키려는 데 있음. 경제·기술적 성공은 이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으며, 대한민국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전략적 의존·외국 영향력·상호주의의 비대칭과 초국경 환경·안전 위험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됨. 그러나 중국의 위험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중국 국민을 적대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음. 중국의 성취는 인정하되 체제를 미화하지 않고, 중국의 힘은 경계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분별이 필요함

■ W — Way Forward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중국과 평화롭게 교류하면서도 주권과 자유, 국민의 안전과 신앙을 지키고 변화된 환경에서 중국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1] 국가 차원의 ‘중국 복합위협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국 관련 위험은 외교·국방·산업·사이버·교육·해양·환경·원전안전·정보 등 여러 영역에 흩어져 있음. 이를 하나의 국가안보 틀에서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범정부 체계가 필요함
- 공급망, 핵심기술, 온라인 영향력, 대학, 서해, 북한, 대만 등 주요 사안별로 중국의 능력과 의도, 접근경로,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대기오염·원전사고처럼 의도와 무관한 초국경 위험은 발생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별도 관리해야 함
- 중국발 대기오염, 서해 해양환경, 중국 연안 원전의 사고 위험을 상시 감시하고 대기·해양 방사능 독립측정, 사고 조기경보와 국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함
- 위험이 현실화된 뒤 대응하기보다 발생확률이 낮더라도 국가적 피해가 치명적인 분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에 대비해야 함

[2] 중국과 교역하되 핵심 공급망, 인력, 기술, 데이터의 전략적 의존도를 낮춰야 함

- 희토류와 배터리 핵심 소재, 의약품 원료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략품목은 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우방국 공동공급망을 확대하여 공급중단 위험에 대비해야 함
- 반도체·AI·원전·조선·방산·배터리의 핵심기술과 연구데이터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호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커넥티드 장비도 서버, 펌웨어, 데이터 전송, 원격접속 기능까지 보안심사해야 함
- 전략적 의존은 산업인력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국적·체류자격이 확인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가운데 중국계 비중이 약 89.6%였던 만큼, 불법체류·불법고용을 엄정 관리하면서 합법적 외국인력 공급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교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갈등에서도 중국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회복력을 갖추자는 것임. 다변화 비용은 국가의 선택권을 지키는 보험료임

[3] 외국정부의 국내 영향력과 자금·학술·정보 네트워크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외국정부·국영기관과 연계된 대학·연구기관·문화기관의 일정 규모 이상 자금지원과 주요 계약, 사업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자학원과 해외 학술협력도 자금출처, 교원선발, 교육과정, 연구정보접근, 학문의 자유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해외에서의 축소·폐쇄 경험도 참고해야 함
- 선거와 주요 사회갈등 시기에는 외국과 연계된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조작, 허위정보, 정치적 영향력 활동을 조기에 탐지하고 자금·계정·조직의 연계성을 추적할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정상적인 국제교류는 적극 보장하되 외국정부가 자금·조직·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론·연구·핵심인물·민감정보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지방참정권에 상호주의·안보 원칙을 적용해야 함

- 외국인의 주택·토지 취득이 주택시장·투기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국적·지역·용도별로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함
- 군사시설·항만·공항·전력·통신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의 외국인 토지 취득에는 강

화된 신고·심사와 필요시 제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지방선거권도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되 상대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참정권 보장 수준과 국내 외국인 인구구조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서해·대만·북한을 하나의 동북아 안보구도에서 준비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함

- 서해에서 중국의 구조물, 해경, 해양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작은 현상변경도 장기간 기록하며 해경·해군의 현장 대응능력과 국제법적 대응근거를 축적해야 함
- 대만 유사시 해상물류, 반도체, 에너지, 중국의 경제압박, 북한의 동시도발, 주한 미군뿐 아니라 중국 체류 국민의 대피와 기업의 비상철수까지 포함한 복합위기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함
- 중국의 협력을 추구하되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도 대비해 한미동맹과 독자적 억지력, 일본·호주·유럽 등 우방국과의 기술·공급망·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함

[6] 한국 교회는 ‘오늘의 중국’을 배우고 새로운 중국선교 지침과 보안의식을 갖추어야 함

- 교회는 과거의 단순한 반공교육을 반복하기보다 공산혁명·일당체제·종교통제와 함께 중국의 놀라운 경제·산업·기술적 성취까지 함께 가르쳐야 함. 중국의 성취는 인정하되 그것을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교단과 선교단체는 중국 전문가와 현장 선교사의 경험을 모아 중국정세·종교법·보안·선교윤리를 포함한 새로운 중국선교 지침을 마련해야 함. 무비자·관광 입국을 이용한 무리한 전도가 참가자뿐 아니라 현지 교회와 성도에게 미칠 위험도 교육해야 함
- 교회에도 군인·공무원·반도체·방산·원전·AI 종사자 등이 있는 만큼 직장·연구·군사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는 기본적인 보안의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전문가 세미나, 공개자료, 산업정보 등을 통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안전과 법적 요건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합법적인 학습형 현장연수도 검토할 수 있음. 목적은 은밀한 전도가 아니라 실제 중국을 이해하

는 데 두어야 함

- [7] 중국 현지 진입형 선교에서 국내외 중국인을 섬기는 선교로 지평을 넓혀야 함
- 중국에서 외국인의 전도와 종교활동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는 과거 방식의 단기선교를 반복하기보다 선교의 장소와 방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함
 - 한국에는 중국인 유학생·직장인·사업가·중국동포 등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중국인이 많음. 한국어교육·생활지원·문화교류와 함께 원하는 이들에게 예배·성경공부·제자훈련을 제공하는 국내외 중국인 선교를 강화할 수 있음
 - 중국 현지 교회를 위협하게 만드는 무리한 연결보다 기도·신학교육과 해외 중국인 교회·선교단체를 통한 지원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야 함. 중국선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선교의 지리와 방법이 달라졌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핵심 정리]

- 대한민국의 목표는 중국과 단절하거나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압력과 위협에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해 중국의 복합위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기술·인력·데이터의 과도한 의존을 낮추며,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상호주의·동북아 안보와 초국경 환경위협에 대비해야 함. 한국 교회도 중국의 성취는 인정하되 체제를 분별하고, 사람은 사랑하되 위협에는 지혜로운 경계를 세워야 함. 변화된 중국을 정확히 배우고 새로운 선교지침과 보안의식을 갖추며 국내외 중국인을 섬기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중국선교로 지평을 넓혀야 함

■ Action Checklist

- ☐ 나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오늘의 중국에 관한 정보를 특정 유튜브나 단일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통계·신뢰할 수 있는 복수의 자료로 확인하며, 필요한 내용을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가르친다.
- ☐ 나는 우리 교회의 중국 단기선교와 방문 프로그램이 중국의 종교법과 보안환경,

참가자뿐 아니라 현지 성도들의 안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나는 교회 안의 군인·공무원·연구자·반도체·방산·원전·AI 등 민감 분야 종사자들이 직장정보·연구내용·군사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 나는 우리 교회가 중국에 직접 들어가는 선교만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직장인·이주민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국내외 중국인 선교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나는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종교·인권 억압은 분명히 분별하되 중국인을 혐오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중국 국민을 사랑하며 중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 Final Message

- 오늘의 중국은 놀라운 경제·기술적 성취와 그 막대한 힘을 지배하는 중국공산당 일당체제를 함께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적 성공은 그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뜻하지 않으며, 당의 통제를 벗어난 인간·기업·교회와 사회의 자율영역을 경계하는 통치구조를 함께 보아야 함
-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의 힘과 규모가 우리의 경제·안보·환경·신앙과 국가적 선택을 제약하는 위협으로 작동할 가능성임
- 한국 교회는 변화된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한 현지 선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교지침을 세우며 국내외 중국인 선교로 지평을 넓혀야 함
- 우리는 중국과 교류하되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성취는 인정하되 체제를 미화하지 않으며, 중국인을 사랑하되 자유와 복음을 지킬 분별력과 힘을 갖추어야 함

■ 기도 제목

1. 대한민국이 중국을 정확히 분별하고 자유와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경제·기술·외교·정보·군사적 힘과 그 규모에서 비롯되는 환경·안전 위협까지 정확히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단기적 이익이나 강대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대한민국의 지도

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신앙의 자유와 국가 주권을 책임 있게 지키게 하소서!

2. 중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 종교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중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며, 국가와 당보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굳게 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많은 중국인이 복음을 만나게 하소서!

3. 한국 교회가 오늘의 중국을 바로 알고 새로운 중국선교의 길을 열어 가도록

- 한국 교회가 중국의 놀라운 발전은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공산당 체제와 종교통제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교단과 선교단체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중국선교 지침을 마련하며 국내외 중국인을 섬기는 지속가능한 선교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게 하소서!

※ 본 리포트는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참고: 최근 SIEW REPORT 목록

- [2026년 제7호] “가공할 중국의 위협 -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오늘의 중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 [2026년 제6호] “폭등과 폭락 사이, 한국 증시는 무엇에 흔들리는가? - AI 반도체·환율·정부정책·레버리지와 기독교인의 자산관리”
- [2026년 제5호]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는가?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국민 보호의 공백”
- [2026년 제4호]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의 3,030표와 1,440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 통계적 의심과 민주주의 신뢰의 과제”
- [2026년 제3호]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는가? -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신뢰, 그리고 교회의 책임”
- [2026년 제2호] “한국 상황에서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2026년 제1호] “6.3 지방선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위 SIEW REPORT는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홈페이지(www.siew.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